

“농민헌법 제정 마지막 기회” 지역 농민들 트랙터 몰고 상경

광주·전남 단체 “쌀 수입 중단·쌀값 보장” 5월 6일 도청 출발
트랙터 30대 등 200여명 전주·공주 거쳐 10일 광화문 도착

전남 농민들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농업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상경투쟁에 나선다. 농민들은 이번 조기대선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농업 현실 과제를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은 특히 이번 상경 투쟁을 통해 쌀 재배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쌀 수입 중단과 쌀 값 보장만큼은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와 민주당 등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을 제도로 보장해달라는 게 농업인들의 요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9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전봉준 트랙터 3차 발진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이 바뀌어도 농민들 살림살이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쌀 수입 중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여성 농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명줄이 쌀 개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촌과 지역의 소멸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 당 논벼 순수익은 27만 584원으로 전년(35만 7593원) 대비 24.3% 감소했다.

2022년 전년보다 36.8% 급감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10a 당 순수익률은 2016년(21.2%) 이후 가장 낮은 23.5%로 1년 새 5.5%포인트 하락했다.

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산지 쌀값은 20kg 당 4만 6000원으로 전년(5만 1000원)과 비교해 8.9%나 급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보장은 헛말이 됐고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농업인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정부가 매년 들어오는 40만 t 수입 쌀 물량에 대한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농산물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0년 넘게 같은 양을 수입하고 있고,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되지만,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농가들 입장에서 수입 쌀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식 쌀협회 관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농업 정책 공약에는 어떻게 쌀 가격을 안정시킬 지, 수입 쌀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다짐을 받고 현재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오는 5월 6일 트랙터 30대와 행진단 200명이 참여해 전남도청을 출발, 광주와 전주, 충남 공주를 거쳐 5월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트랙터 행진에는 여성 농민 20명이 트랙터 운전대를 직접 잡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광주, 전남의 트랙터가 국민의 응원과 환호 속에서 서울로 임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29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전봉준 트랙터 3차 발진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쌀 수입 중단’과 ‘농민 헌법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등골 휜다’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

193곳 1인당 연간 7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올라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중 136개 대학(70.5%)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원으로, 작년보다 28만원가량 올랐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로,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우선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36곳이 일제히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나머지 57곳(29.5%)은 동결했다. 전체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로 집계됐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육대(10곳)와 한국교원대, 서울사립대를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했다. 교육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 6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만 7000원 상승했다.

사립대는 800만 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 8900원으로 추산됐다. 계열별로 보면 의학이 1016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814만 4000원), 공학(754만 4000원), 자연과학(713만 8600원), 인문사회(627만 2600원)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 이래로 등록금 인상 추이를 살펴볼 때 올해가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대 학생 1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45만 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만 8600원(4.2%) 상승했다. /연합뉴스

“오늘까지 미복귀 의대생 유급처분 확정하라”

교육부, 의대에 공문 보내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이번 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할지 오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시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대학이 4월까지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단 올해의 경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제한

이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다. 이런 대학의 경우 유급 제한이 5월로 넘어간 구체적인 사유와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도록 교육부는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지난 17일 발표한 평균 26%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학년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의견을 나눈다. 이 경우 내년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할 24·25·26학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각 의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해 교육부가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학 편입 규모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6등급으로 결정된다. 1등급은 결원 전체를, 6등급은 결원의 15%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맡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표기관 선정

전남대병원이 지역 내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선정 결과, 전남권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신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분만전문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

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인건비·진료수당 등 연간 성과에 따라 최대 16억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현재 전국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협의화장을 맡고 있는 김윤하 전남대병원 모자의료

센터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분만 전문 병원들과 체계적으로 고위험 임신부·신생아에 대한 전원 및 진료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출산을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 고위험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